전망기획(6) 2012년, 가계부채위험은 관리할 수 있는가

가계부채의 새로운 위험요인과 대책

2012.01.16|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naver.com

목 차

1.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

2. 우리만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3. 새로운 위험, 서민 부채의 급증

4. 2012년 가계부채위험 관리 정책방향

5. 참고: 2003년 카드대란에서 생각해볼 두 가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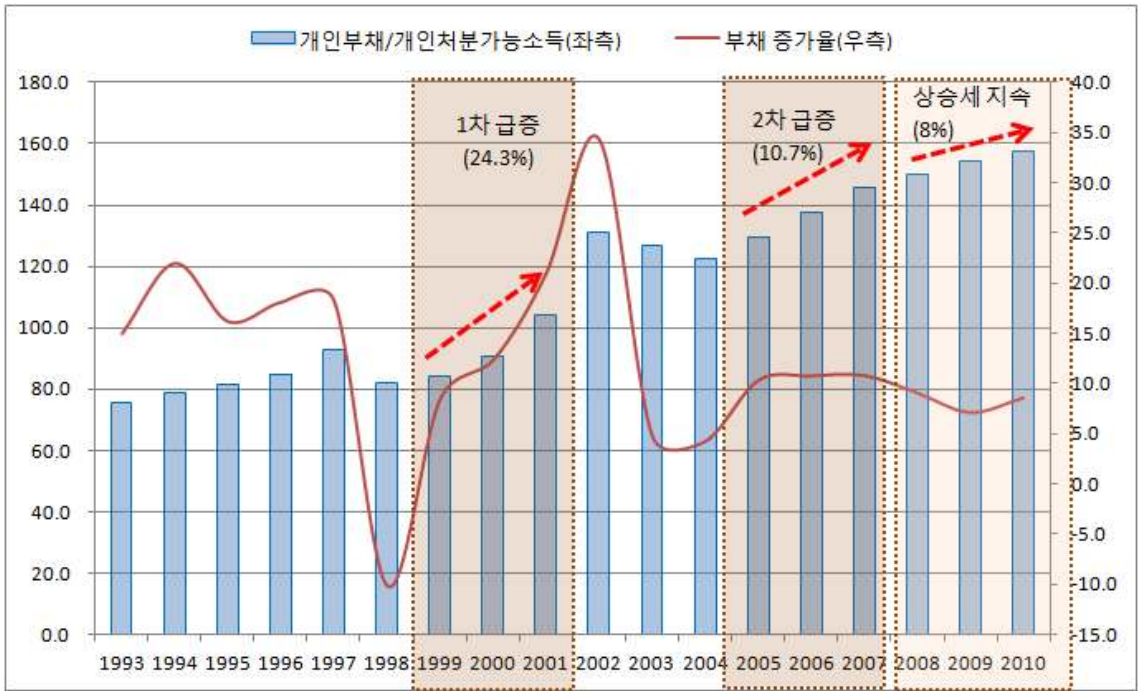
http://saesayon.org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은 '가계부채'라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았다. 수년 째, 같은 경고가 되풀이 되고 있지만 아직 가계부채위험은 폭발하지 않았다. 2011년 봄 주택건설과 연동된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터지면서 국지적으로 충격이 가해진 것이 거의 전부였다. 그러다 보니 가계부채 위험성 수치는 점점 더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내성이 생기면서 '위험한 수준이 한 두 해 지속된 것도 아닌데,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하는 안이한 생각도 할 법하다.

그러나 위험하다고 과장을 하든, 아니면 당장은 괜찮은 수준이라고 방심을 하든 가계부채가 불안 요인을 갖고 누적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문제점에 더해 새로운 위험요소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덧붙여 지난해부터 거시경제 환경도 악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누적되어온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더 크게 부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1.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

그림 1 : 가계 부채의 증가 추이(한국은행 자금 순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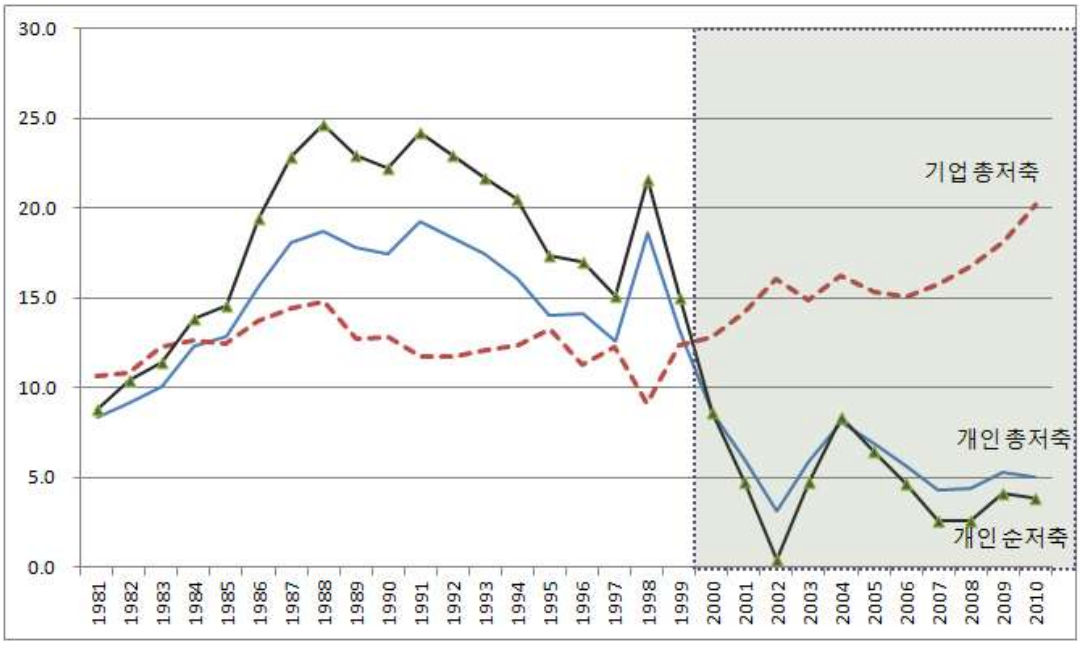


2012년 1월 시점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은 한마디로 "양적 증가의 지속과 질적 내용의 악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부채를 통한 소비확대의 붕괴를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

서 가계부채의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가계와 은행의 부채축소가 수년째 계속되면서 정부 부문이 부채 확대를 감수하고 이를 흡수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만은 예외다. 2008년 이후부터 2011년 말까지 가계부채 증가는 멈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조차 거의 늦춰지지 않았다. (그림 1 참조)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2009년 잠깐 내려갔지만 2010년 다시 올라갔고 평균 8%이상 유지되고 있다. 이는 가계 소득증가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 경제 성장률마저도 웃도는 증가 속도다. 그 결과 2011년 3분기까지 가계부채는 1071조원까지 올라갔는데 최근 1년 동안에만 약 90조원이 늘어난 것이다.[1] 소득과 경제성장을 뛰어넘어 가계부채가 늘어나다 보니 가계 부채/가처분소득, 가계 부채/국내총생산(GDP) 값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 비율은 2010년 157.6%까지 올라갔고, GDP대비 비중은 86.4%까지 늘어났던 것이다.[2] 올해부터 다시 경제의 어려움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당장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꺾어야 하는 것은 물론 절대규모를 줄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난제가 앞에 놓여 있다.

그림 2: 가계와 기업의 저축률 변화 추이(한국은행)



1)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의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가계와 개인사업자, 그리고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를 포함한다. 가계부채를 보는 다른 지표로서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잡는 가계신용(금융기관의 가계대출 + 판매신용) 기준으로 보면 2011년 3분기에 가계부채는 892조원으로 집계되어, 1년 전 대비 73조 원이 늘어났다.
2) 우리나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09년 기준 OECD평균 134.1%보다 훨씬 높은 9위 수준이다. 또한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 역시 OECD평균 77%보다 거의 10%이상 높은 12위 수준이다.

부채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저축이 줄어드는 구조 역시 전혀 바뀌지 않았다. 우리 국민의 저축성향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 자유낙하 수준으로 추락하여 2007년 2.6%까지 내려갔는데 이는 세계 최저수준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 가정들은 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우리보다 저축률이 앞서가고 있다. 우리도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가계 저축률이 4.1%로 잠깐 올라갔지만 불과 1년 만에 다시 3%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2 참조) 이는 2010년 OECD평균 7.4%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기업은 저축률이 계속 올라갔고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미래 위험에 대비한다는 명목아래 오히려 저축을 더 쌓고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업은 미래 경제 환경 위험을 대비하고 있지만 가계는 미래 경제 환경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고 있다 할 것이다.

왜 가계 빚은 계속 늘어가고 저축을 거의 하지 않는,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미래 위험에 전혀 대응할 수도 없는 가정경제 패턴이 2000년대 이후 확대되고 있는 것일까.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확대 등 우리나라도 유럽 선진국처럼 사회보험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가처분 소득은 줄고 저축 유인이 줄어든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3] 일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혀 본질적인 측면은 아니다. 사회보장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인 스웨덴 노르웨이의 저축률이 모두 OECD평균 이상인 것이 이를 말해준다.

사실 소득을 묶어놓고 부채를 늘려서 민간소비를 증대시키는 경제성장 패턴은 신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성장 메커니즘이었다. 가계 부분은 부채로 소비하여 구매력을 유지시키고, 금융 부분은 부채 공급을 위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쏟아내면서 성장 동력을 확대하고, 부동산과 자산시장 부분은 투기를 유도함으로써 저축을 자산시장으로 유입시켜 성장세를 이룸으로써 지난 2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안정기(Great Moderation)를 누렸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최종적인 붕괴가 바로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규제완화와 감세, 금융화, 민영화 논리가 정책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자본주의의 성장양식도 부채를 늘려 내수를 촉진하고 가계경제를 성장시키는 경제시스템, 이른바 '적자호황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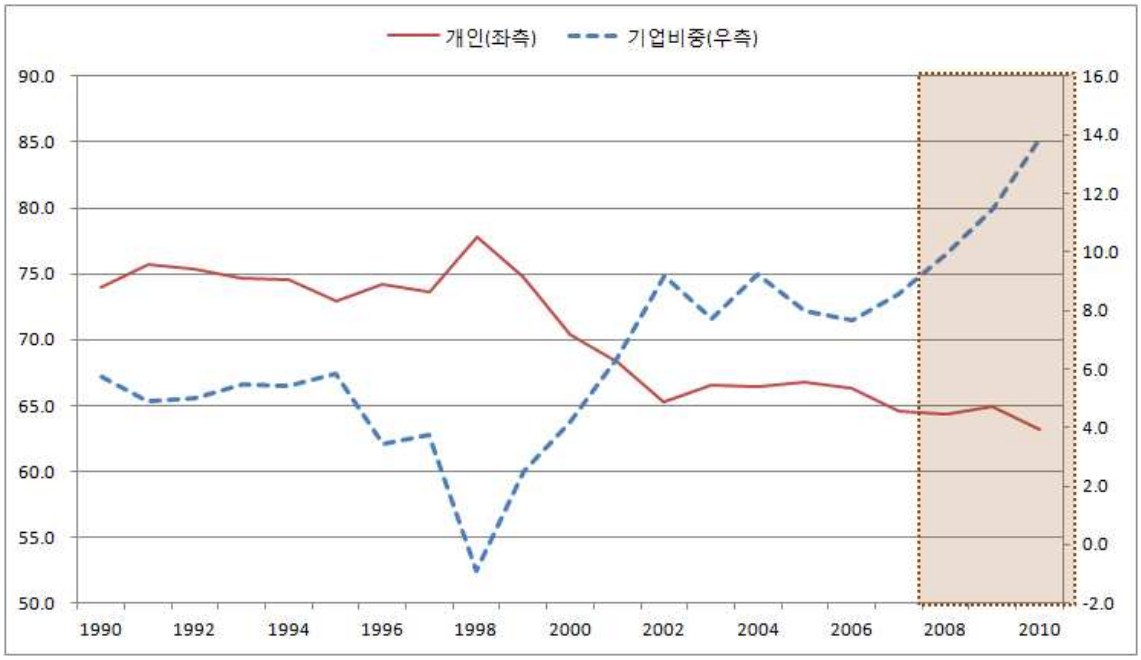
이런 유형의 시스템이 이미 붕괴된 미국은 2009년부터 부채축소, 저축확대의 단계에 들어갔지만, 아직 직접적 충격이 없는 한국과 상당 수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적자 호황'국면의 끝 언저리를 맴돌면서 부채위험요인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3) 삼성경제연구소, "가계저축률 하락 원인 진단과 과제", 2011.12

"낮은 소득 - 높은 부채 - 낮은 저축"은 절대 지속 불가능하고 가계의 희생을 담보로 한 신자유주의적 내수 성장 동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의 가계 부채를 줄이는 문제는 신자유주의 방식의 내수 성장 동력을 폐기하는 어려운 과제다. 또한 1998년 이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누적된 가계 부채를 줄여 가면서 새로운 내수 성장 동력과 가정 경제 살림 패턴을 전환시키는 문제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가계와 달리 기업은 정 반대로 더 이상 외환위기 이전처럼 부채를 늘리지 않고 오히려 저축을 늘리면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왔다는 사실이다. 가계 저축의 감소와 기업 저축의 증가는 경제 성장의 결과 가계가 차지하는 몫 보다 기업이 차지하는 몫이 커짐에 따라 발생한 측면도 상당하다다. 기업으로 편중된 부의 분배가 가계의 소득과 저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국민 처분 가능소득 중 개인과 기업의 비중 변화(한국은행)



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국민 처분가능 소득 가운데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 부문의 소득 비중은 떨어진 반면 기업부문은 2010년에 2006년 대비 2배 정도 그 비중이 늘어났다. 결국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을 추적해 보면, 가계 소득의 부족으로 환원되고 다시 가계와 기업의 소득 분배의 불균형 문제로 귀착된다. 이는 가계부채 누적의 근원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국민적으로 함께 숙고해야 할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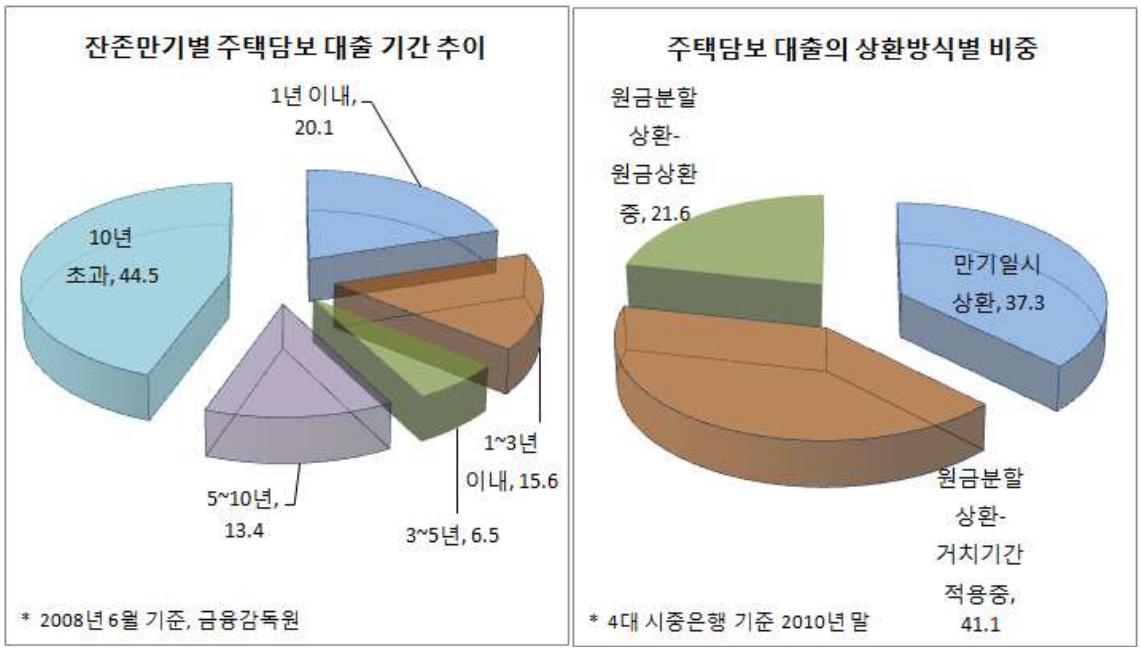
2. 우리만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우리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와중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달리 양적인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우리 가계의 두 번째 위험성은 부채구조가 다른 나라와 달리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에 있다. 이 역시 익히 알고 있는 문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취약성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주의할 대목이다. 대표적인 구조 취약성 세 가지를 짚어보자.

(1) 대출기간이 짧고 원리금 일시상환이 많다.

만기가 10년 미만인 주택담보 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통상적으로 모기지 대출은 20~30년 장기 대출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출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길지 않은 대출기간에 더해 원금상환 방식도 만기 일시 상환 비중이 37.3%로서 매우 높은 편이다.[4](그림 4 참조)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말 부터이고 특히 2005년 이후 더욱 팽창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대출 만료 기간이 집중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림 4: 대출 기간 별 구성비 및 상환방식별 구성비



더욱이 그 동안에는 3~5년 동안 정도로 설정되어 운영된 '거치기간'이 다가오면 은행에서 거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거치기간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원리금 상환을 회피하는 경우가 1/3정도 되었다고 한다.[5]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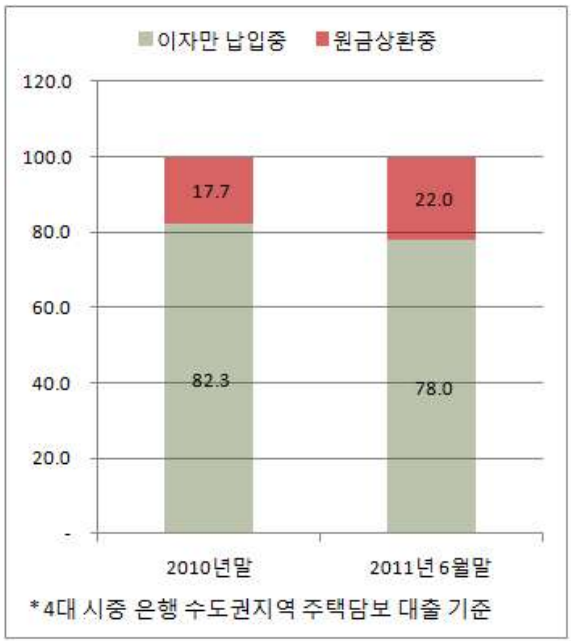
4) 일시 상환비중은 미국은 9.7%, EU는 7.5%등 대체로 10%가 안 된다.(주택담보 대출 2010년 기준) 40% 전후의 우리나라 일시상환 비중은 매우 높은 것이다.
5)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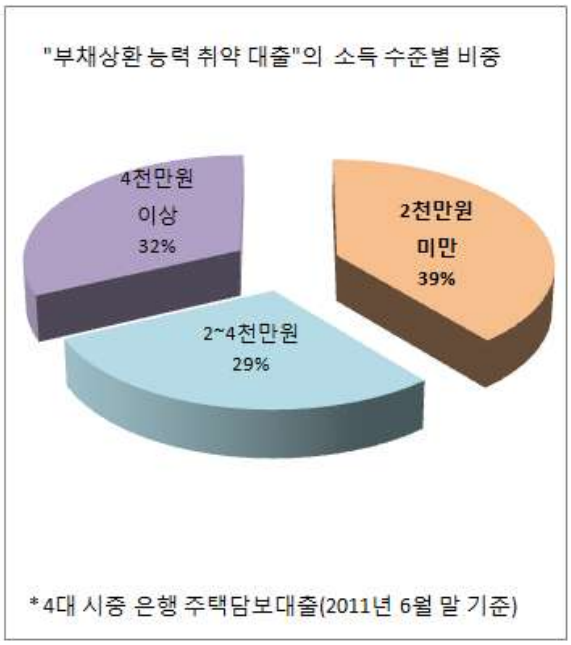
금융당국의 규제와 은행의 대출 태도 변화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중이다. 2012년 이 부분의 구조 취약성 노출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2) 이자만 갚아 왔는데 원금상환이 시작되었다.

그 동안 1년 반 이상을 번 소득을 모두 투입해야 빚을 갚을 정도로 가계부채가 커졌지만, 지금까지는 이자만 갚으면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 연체나 부실위험이 적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원리금 상환이 개시되면 양상이 다를 수 있다. 은행들은 2005년부터 거치기간을 설정한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을 본격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대출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있다고 한국은행은 판단하고 있다.[6] 실제 자료를 보아도 2010년 말까지만 해도 이자만 갚는 주택담보 대출 규모가 17.7%에 불과했는데 6개월 뒤에는 22.0%까지 늘어났다.(그림 5 참조) 이런 추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면서 가계의 상환부담은 이전에 비해 훨씬 커질 것이다.[7]

그림 5: 주택 담보 대출의 원금 상환 비중과 취약 대출의 소득 수준별 비중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부채 상환능력이 낮으면서 이자만 납부하는 부채상환능력 취약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 대출 잔액의 26.6%를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연소득 수준이 2천만 원 미만인 비중도 39%에 달한다는 점이다. 특히 부채상환능력 취약 대출의 만기도래가 2012년 21.2% 몰려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진단이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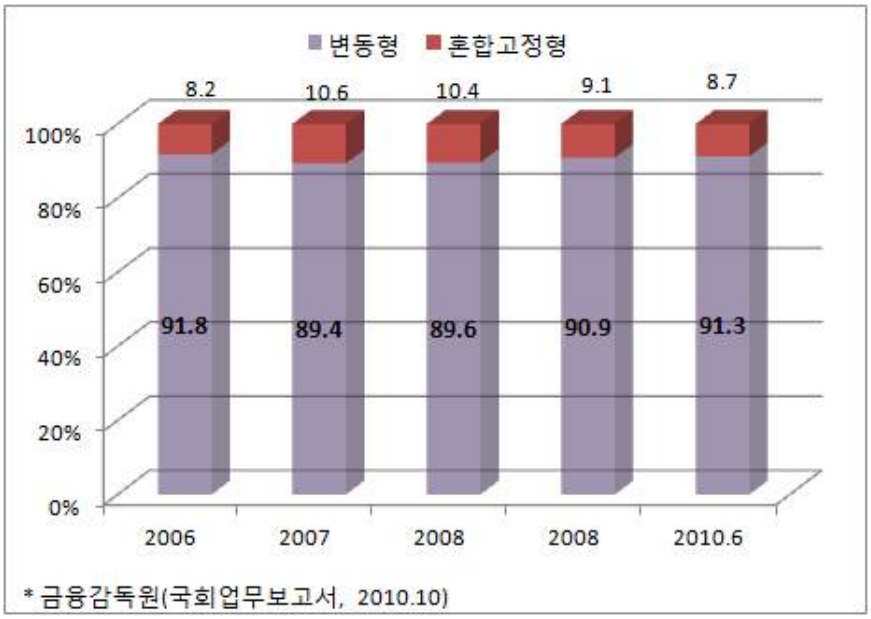
6)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1.10
7) "2011년 6월 말 현재 연체중인 대출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연체대출 가운데 절반 정도가 원금 상환이 개시된 이후 10개 월 이내에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2011년 10월 금융안정보고서 34쪽)
8)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1.10

구조적 취약성이 올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3) 금융시장 변동성에 약한 변동금리 대출이 90%다.

가계 부채 가운데에서 시장 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 금리보다는 변동 금리 형태가 91%로 압도적으로 많아 금리인상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주택관련 대출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기준 미국 10%, 프랑스 13%, 영국 62%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9)]

그림 6:은행권 금리 조건별 가계 대출 비중 추이



변동 금리형 대출은 금리 변동시 그 위험을 은행이 아닌 가계가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계에 불리한 구조다. 결국 금리변동이라는 미래의 위험을 은행이 떠안는 것이 아니라 가계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금리조건이다. 물론 올해 상당 기간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묶어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변동으로 인한 가계 충격이 단기간에 올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높은 경기변동성은 경제변동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금리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할 때에 가계가 받는 충역도 매우 커질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도 가계 부채라는 족쇄에 갇혀 경기변동에 대응하면서 유연하게 금리정책을 사용하기가 올해도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3. 새로운 위험, 서민 부채의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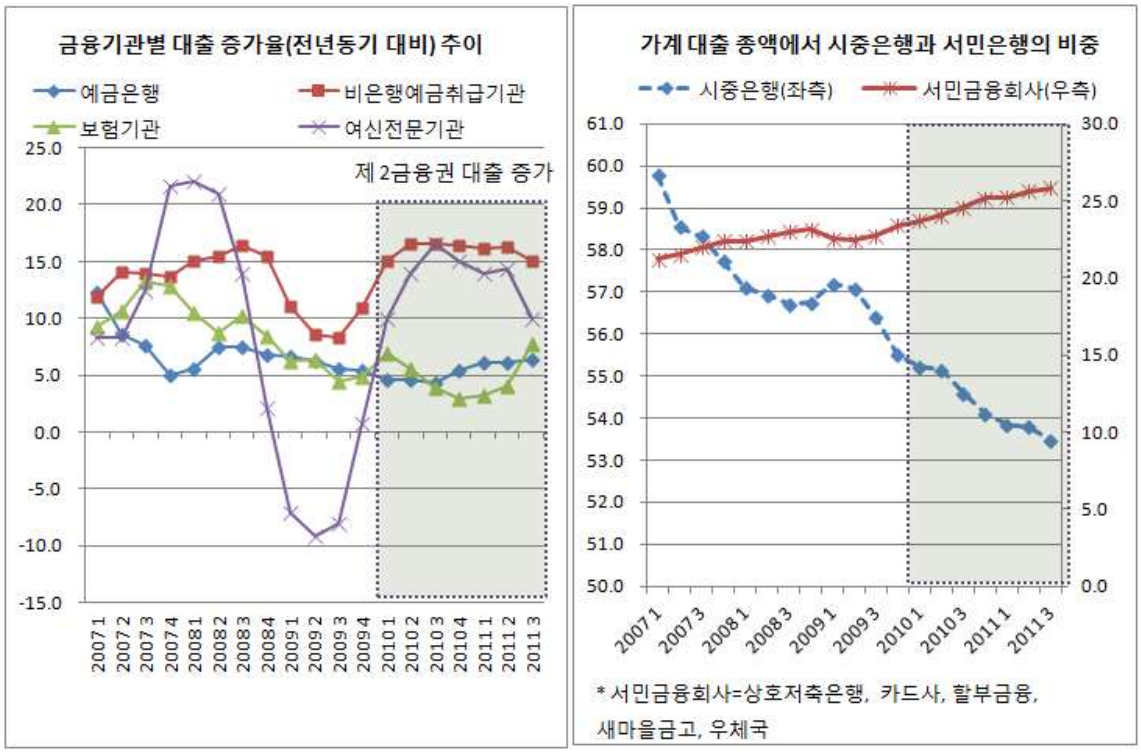
9)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대출에서 금리 변동을 적용하는 주기도 3개월로 매우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그 만큼 이자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다. 일본이 6개월 이상이고 미국도 1년이다. 당연히 주기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 가계부채가 만기구조, 상환구조, 금리결정구조 등의 취약성을 처음부터 안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지금까지 잠복되어 있었던 구조 취약성이 지난해 이후 경기가 다시 하락세를 타면서 수면위로 점차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도 확인했다. 그러나 우리 가계부채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부채 규모 팽창이 멈추지 않고 있는 와중에 구조적 취약성 노출 가능성까지 생기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 지난해이후 새로운 가계부채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1) 이자가 높은 제 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특히 반짝 경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던 2009년 말 이후 우리 가정의 금융 상태에 중대한 몇 가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첫 번째는 이자가 높은 제 2 금융권의 대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0년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은행 대출은 8.5%증가한데 비해서, 제 2 금융권은 두 배가 넘는 17.9%나 늘어났다. 지방 주택경기 상승에 따른 상호금융의 주택담보 대출이 늘어났던 측면과[10], 서민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 2금융권 이용을 늘렸던 점이 수요측면의 이유일 것이다.

그림 7: 금융기관별 대출 증가율 차이와 서민금융회사 대출 비중 증가 추이



동시에 2010년 이후 신용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은행에서 분리되면서 대출경쟁에 나섰던 공급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제 2금융권 대출의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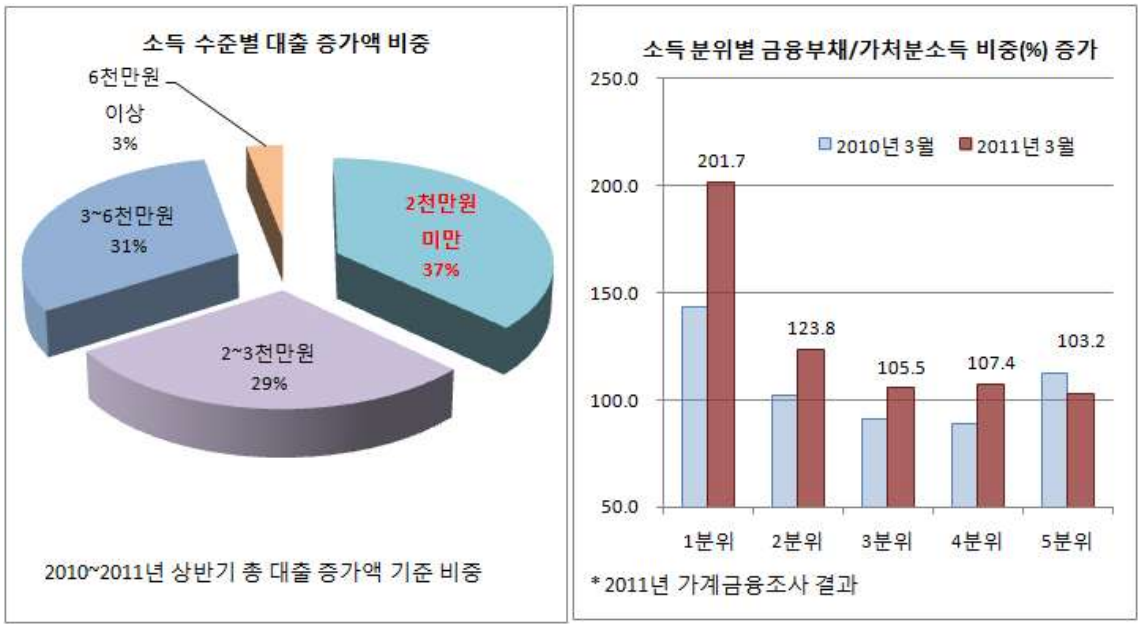
10) 제 2 금융권 가계대출 가운데 실제로 주택담보 대출 증가율이 높았다.

연한 증가를 이끌었던 것은 카드사였기 때문이다.(그림 7 참조) 그 결과 전체 가계 대출에서 차지하는 은행의 비중은 줄어들고 이자가 높은 제 2 금융권 대출 비중은 높아졌다. 똑 같은 가계 부채규모라고 해도 가계가 짊어질 부담이 커졌다. 제 2금융권의 평균 대출 금리는 24.4%로서 은행 대출금리 9.8%의 평균 2.5배에 이른다. 제 2 금융권으로 가면 지금이 초저금리 시대라는 말은 무색해진다.

(2) 비싼 이자로 돈 빌리는 계층은 저소득층이었다.

평균 20%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물고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계층은 주로 저소득층이었다. "저소득 계층의 경우 대출 잔액은 전체 가계 대출의 12%에 불과하지만 2010~2011년 상반기 중 총 대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달하여 여타 소득 계층에 비해 증가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8 참조)

그림 8: 저소득 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부채비율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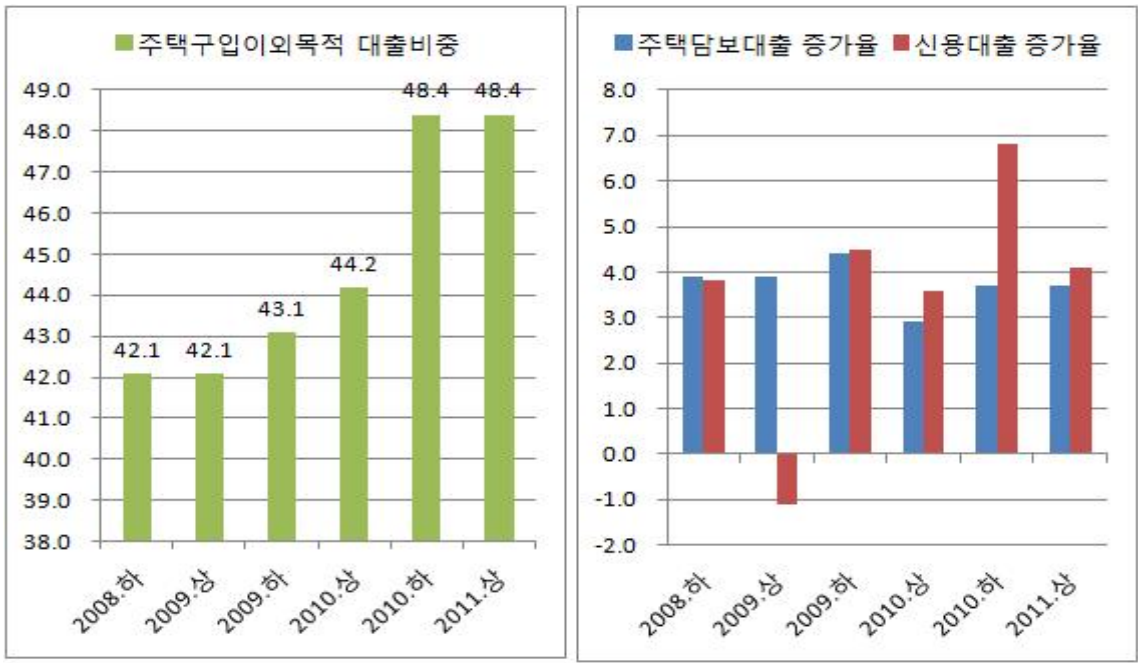
최근 1~2년 동안 하위 20%(1분위) 저소득층의 대출이 급격히 팽창하다보니 이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해에 무려 201.7%까지 올라갔으며 그 위의 20%(2분위)도 123.8%까지 올라갔다. 평균 2년 정도의 소득을 모두 쏟아 부어야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소득으로 갚을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3) 고율 이자로 저소득층이 빌린 돈은 생활자금이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가을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가계 대출은 주택 구입목적 보다 생활형 자금 성격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담보대출 중 주택 구입 이외 목적 대출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2011년 상반기 중 48.4%를 기록했다."고 보고하고 있다.(그림 9 참조)

또한 "생활형 자금 성격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가계의 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높은 물가 오름세 등으로 생계비 지출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11]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잡아서 일회적인 소모성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제 소득도 모자라 자산을 사실상 잠식시키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림 9: 주택 구입 이외의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 대출(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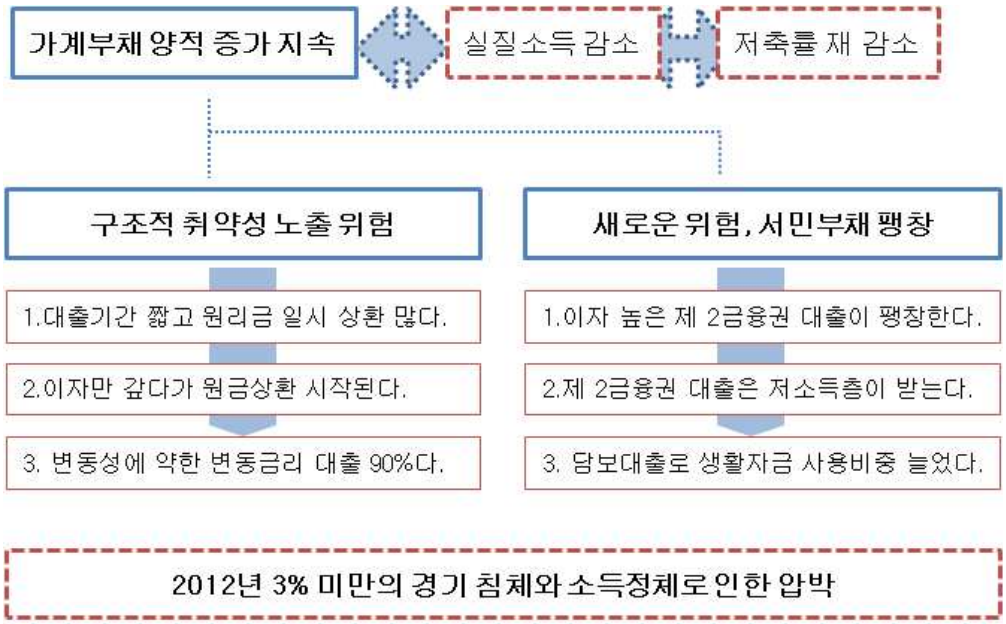
요약을 하자면 이렇다. 최근 "이자가 높은 제 2 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고 있는데, 주로 저소득층 들이 받는 대출이고 그 돈을 빌리는 목적이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서 빌리는 자금"이라는 것이 금융위기 이후, 특히 2010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가계부채의 새로운 특징이다. 뭘 말하는가. 금융위기 여파로 특히 저소득층이 소득 불안이 수 년 동안 개선되지 않자 부채를 줄이기는커녕, 생활난 해결을 위해 추가로 비싼 이자까지 물면서 부채를 늘려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하위 20%가구의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가 200%를 넘는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가계부채의 새로운 위험요인이자 가장 폭발성이 높은 지점이 여기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1)가계부채의 절대 규모가 계속 증가했고 (2) 우리나라에 고유한 가계부채 구조 취약성이 온

11)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1.10

존되고 있으며 (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저소득층의 고이자 생활비 대출이 폭증하여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0: 2012년 가계부채의 위험 구조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2.1

4. 2012년 가계부채 위험관리 정책 방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한국의 가계 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외국의 언론이나 투자가들도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주요 리스크로 가계부채를 지목하기도 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역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이제 미국이나 스페인 등 선진국처럼 거대한 거품 폭발 후에 고통스런 자동 조정과정을 겪을 것인가, 아니면 예방적으로 국가가 정책적 개입을 하여 폭발과정 없이 가계부채와 부동산을 연착륙 시킬 것인가 하는 선택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1) 위험성, 분명히 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소 2010년까지는 모니터링을 하는 수준 외에 특별한 예방책을 사용한 적이 없다. ① 아직 담보인정비율(LTV) 47.2%로서 선진국보다 낮다는

점, ② 대출 규모가 큰 중, 상위 소득계층의 부실화정도가 약하다는 점, ③ 연체율이 낮다는 점이 그 근거였다. 심지어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계대출을 풀어주는 정책을 취할 정도로 가계부채는 부동산 경기부양의 종속 변수로 취급했다. 가계 부채가 아직은 끌고 갈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거나, 경기가 조만간 호전되고 소득여건이 개선되면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까지도 "가계 부채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다소 높으나, 건전성, 차주 구성, 금융사 손실흡수 능력, 가계 자산상황 등을 감안할 경우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12] 그러나 2011년 들어와서는 이전과 다르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계 대출에 개입한다.[13] 정부 스스로는 아직 '잠재적 위험요소'라고 폄하하면서도 점점 더 현재화될 수 있는 위험요소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나 사회의 공통된 시각은 "연착륙"이다. 부동산을 보는 시각과 완전히 같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모두 적어도 과잉되어 있고 '잠재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2011년 이후 저 신용 층, 저 소득층, 다중 채무자들의 가계부채 상환 부담 가중이 누적되면 연체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몰리면서 가계 대출의 구조적 취약성이 현재화 되면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 일부도 연체와 파산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채무자인 가계 입장에서는 명백히 위험 수준이 부분적으로나마 현재화될 조짐이 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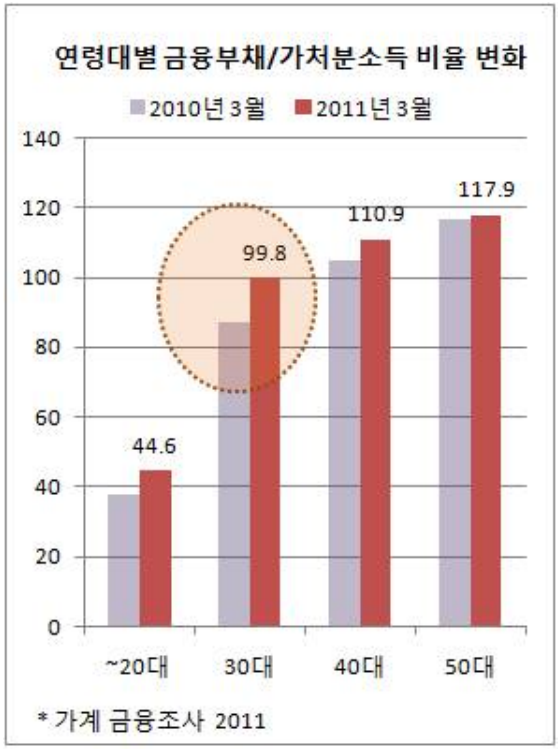
채권자인 금융회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부 주장대로 아직 시중은행의 위험 흡수 능력은 문제가 없지만,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제 2금융권은 다중 채무자의 연체나 파산 충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청년들이나 자영업에서 위험도가 커질 수 있다. 이들은 2003년 카드대란 시기에도 가장 피해가 컸던 계층이다. (그림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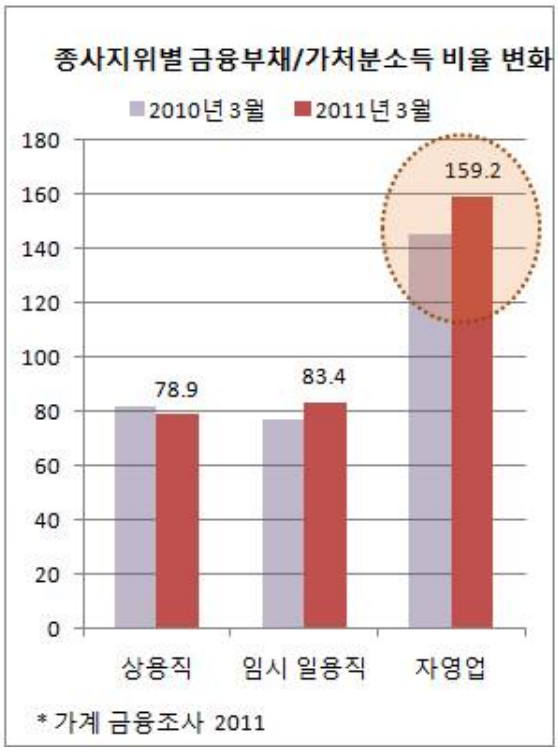
금융권 중심이 붕괴하는 것은 대외에서 오는 충격 정도가 아니면 상상하기 어렵지만, 외곽에서의 국지적 충격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위험은 금융위기 초기인 2008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고 인지된 위험이었지만 결국 2011년 폭발되었으며 저축은행, 건설사, 예금자, 지역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이런 정도 이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

12) 금융감독원,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2011.6
13) 2011.4.15일 '서민금융 기반 강화 종합대책', 2011.6.25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 대책', 2011.12.26일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 대책' 등 이른바 종합대책 딱지가 붙은 것만 3개를 발표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그림 11: 30대와 자영업이 부채비율이 급증





2) 우선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는 아직도 "가계 부채는 경제 성장 및 금융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내수 회복 등 위기극복, 경제성장에 기여"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14] 이런 문제의식아래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경제성장률 밑으로 완화시키는 것이 정책기조다.[15] "낮은 소득 - 높은 부채 - 낮은 저축"에 의한 적자호황 방식은 가계의 희생을 담보로 한 신자유주의적 내수 성장 전략이며 이제 절대 지속 불가능한 방식이라는 문제의식이 안타깝게도 전혀 없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미 가계부채는 내수회복의 동력이 아니라 현재 민간소비를 제약하여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성장의 장애물이 되었다. 더욱이 가계부채는 부동산 정책, 금리정책, 경기부양 정책 등 대단히 중요한 정부정책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정책 제약 요인이 되었다. 남아 있는 것은 미국처럼 폭발해버린 후 고통스런 자동조정 과정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정책적 합의로 '연착륙'시키는 꿈의 해법을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 밖에 없다. 부동산 연착륙이라는 꿈의 해법이 난감한 것처럼 가계부채 연착륙 꿈의 해법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14) 금융감독원,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2011.6
15) 금융감독원, "2012년 금융 감독 방향과 과제", 2012.1

꿈의 해법 찾기 이전에 숙고해야 할 것이 있다. 가계부채를 늘려 민간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성장방식은 처음부터 우리경제에 끌어 들여서는 안 되었다는 사실이다. 금융과 가계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원래 은행은 가계의 저축자산을 관리해주고 이를 기업투자자금으로 돌려주는 중개기능이 본연의 임무였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가계와 은행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가계가 은행 수익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은행은 가계의 저축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여유자금과 금융시장에 끌어온 자금(시장성 수신)을 동원하여 가계에 대출을 해주고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되었다. 우리 은행들의 예대율이 100%를 넘었고 가계 저축률이 최하위라는 것은 이를 명백히 입증해준다. 은행의 가계대상 수익모델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준비를 해야 하며, 가계도 은행이 아니라 사회복지 시스템 등을 통해 가계경제를 꾸려가는 구상에 들어가야 한다.[16] 그래야만 "낮은 소득 - 높은 부채 - 낮은 저축"에 의한 적자호황 방식을 근본적으로 "높은 소득 -낮은 부채 -높은 저축"구조로 바꿀 수가 있다.

그림 12: 가계대출 위험관리 정책 방향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2.1

16)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신용카드'중심의 관행에서 '직불(체크)카드'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정책은 그나마 이런 방향전환의 한 사례가 된다. 직불카드대 신용카드 비율이 독일의 경우는 93:7이고, 신용카드 천국인 미국도 42:58인데 비해 한국은 9:91이라고 한다. 금융감독원,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2011.12

특히 정책측면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의 악순환적 상승관계를 기본적으로 단절시켜야 한다. 부동산 가격유지와 가계대출증가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가계부채 증가와 부실을 막을 방법이 없다. 부동산 정책 고려에서 금융대출 완화를 선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가계부채 증가가 더 이상 부동산 시장에 의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지금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부담 충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대출 금융회사 규제, 무엇을 해야 하나.

현재 가계대출을 적정수준으로 올려 민간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고 가계대출 부실화가 2003년 카드대란 시기처럼 내수경기를 추락시키지 않도록 '연착륙'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책의 우선 과제가 되었다. 때문에 대출 공급자인 금융회사의 대출관리와 여수신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예대율 강화, 자기자본 비율 규정 강화, 대손 충당금 적립규모 상향, 레버리지 비율 규제 등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모두 필요한 조치들이다. 그러나 자칫 이런 조치들이 급격한 자금위축 -> 가계부실 촉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경기여건 악화 국면에는 건전 규정을 완화하고 과열 국면에 강화하는 경기 역행적 정책 취지에 맞도록 정책운용을 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경제 여건이 어려운 환경을 틈타 위험을 쉽게 대출자들에게 전가하고, 오직 수익추구에 매달려 이자와 수수료율을 과도하게 책정하며, 위험한 금융상품을 파는 등의 행위를 더욱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영업 경쟁과 과도한 수수료 체계는 이미 금융당국이 관리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압력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도 부쩍 이에 대한 언급을 늘리고 있지만 아직은 '금융소비자 보호청' 같은 강력한 제도적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금융회사는 수익성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배당부터 자제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현재의 변동금리-거치식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2016년까지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는 공언했으나, 구체적인 수단도 애매하고 실제로 금융회사들이 따라올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예방적 차원에서 대출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원리금 상환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으며, 은행도 대출구조 전환비용을 대출자에게 넘기려 하지 말고 손실가능성을 미리 흡수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대출 수요자인 가계의 신중한 부채관리도 중요하지만 대출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정부의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

5. 참고: 2003년 카드대란에서 생각해볼 두 가지[17)]

1) 어설픈 대출규제는 부실폭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신용카드 시장의 규제를 풀고 국민들에게 신용카드 이용을 장려해왔던 정부였지만 2001년부터 신용카드사의 과열 경쟁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뒤 늦게 규제에 나서기 시작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도적 통제를 한 것은 아니었고 주로 무분별한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수준이었다. 카드 발급시 본인 확인이라든지, 미성년자 카드 발급시 부모 동의라든지, 길거리 영업 금지나 불법적인 카드 모집인 통제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부실 문제가 표면화되던 2002년에 접어들어서야 본격적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다시 규제하고, 신용카드사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과잉 차입하면서 부실해진 자본 건전성을 규제하기 시작한다. 특히 신용카드 부실의 뇌관이 되었던 신용카드 대출(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의 비중이 2001년 말 기준으로 전체 신용카드사 대출의 63퍼센트까지 커지자 이를 50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를 2002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신용카드 회사의 대손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신용카드사 자본 건전성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발표한다.

[표] 신용카드 부실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감독 강화와 규제조치

	주요 정책	주요 내용
2001.12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 카드 발급시 본인 확인, 소득확인 의무화 - 미성년자 카드 발급시 부모 사전동의 의무화
2002.2	길거리 모집 금지	- 불법적 길거리 회원 모집 행위 금지 - 카드 모집인 등록 의무화
	은행 가계대출 기준 강화	- 가계 대출 대손 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2002.3	불법 카드 발급 제제	- 무자격자에 대해 카드 발급을 남발한 3개 카드회사에 대한 신규카드 발급업무 정지
2002.5	신용카드 종합대책	- 카드 수수료 인하유도 - 부당 회원모집행위 금지 - 결제능력에 따른 이용한도 책정
		- 신용카드사 현금대출 비중을 전체의 50%로 제한
2002.10	부동산 과열 대책	- 주택담보비율을 주택가격의 60%로 강화
2003.1	자본건전성 강화	- 신용카드사 대손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 부실채권 조기 상각유도
* 한국금융연구원, “신용 불량자 급증의 원인과 대책”, 5쪽 자료 재구성		

17)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03 신용카드 부실의 폭발, 그 비극의 드라마”,2010.3

그러나 정부의 뒤 늦은 감독과 규제 대책은 오히려 신용카드 부실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된다. 정부가 불법 카드 영업을 단속하는 수준의 감독을 시작한 2001년 말에는 이미 신용카드도 8천만 장 이상 발급되었고 신용카드 대출 역시 잔액 기준으로 50조 이상이 풀려나간 뒤였다. 부동산 담보 대출과 신용카드 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 대출도 역사상 최초로 300조 원이 넘어갔다.

이미 폭발 직전까지 도달한 신용카드 시장을 앞에 두고, 신용 공급자인 신용카드사에 대한 정부의 대출 규제와 자본 건전성 감독 강화 조치는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급격한 대출 억제를 하도록 했고, 늘어난 이자와 원금 상환에 몰린 대출자들은 더 이상 신용카드사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상환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규제완화 -> 신용카드사 과잉 대출과 부실 위험 축적 ->정부의 건전성 규제 도입 -> 대출 억제 -> 부실 위험의 폭발이라는 도식이 작동하면서 200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신용대란이 현재화되었고 2003년 말까지 확산일로를 걷게 된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되었던 미국 역시 2005년까지의 저금리 상황에서 엄청난 모기지 대출이 풀려나가고 각종 위험한 대출 행위들이 성행하다가 뒤늦게 미국 정부가 금리를 올리는 등 감독 조치를 취하면서 2006년 말을 분기점으로 부실이 폭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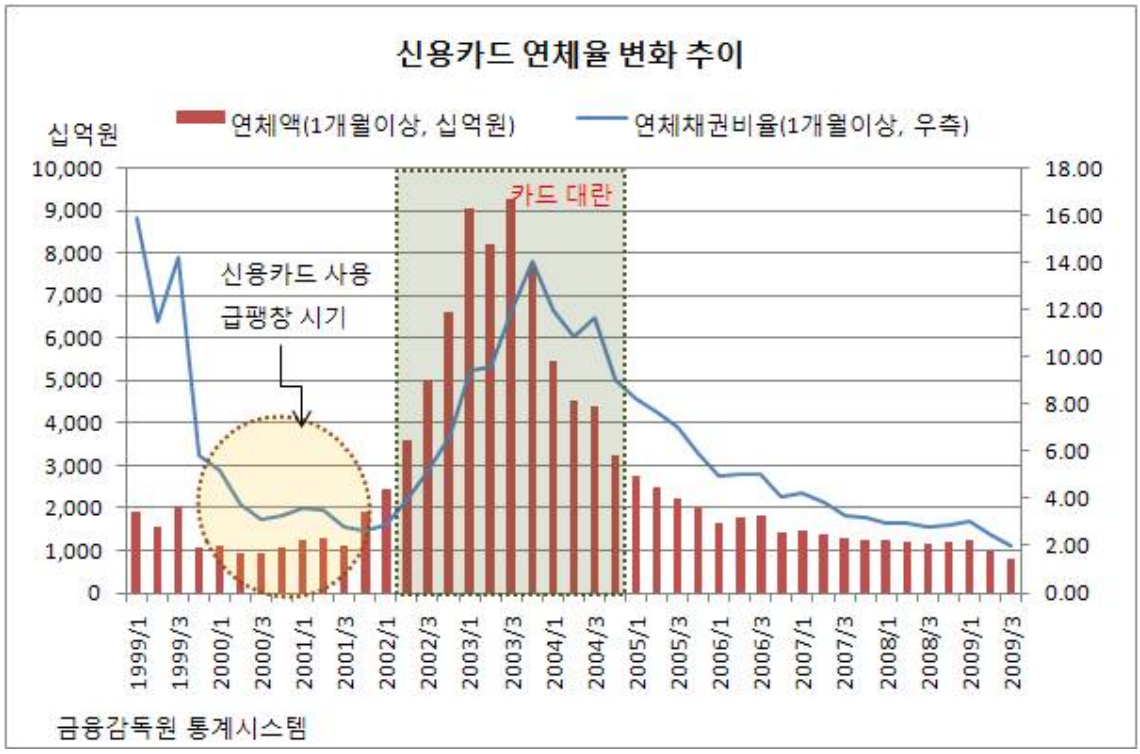
부채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실제 위험수위에 달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나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조치를 경기 순응적으로 수행할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경고해주는 사례다. 그렇다면 한국의 2012년 가계부채는 어떤 시점인가. 다가오는 경기침체와 맞물리면 충분히 규제조치가 역효과를 낼만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2) 대란 전야에 연체율이 가장 낮았다.

부실 폭발 직전인 2001년 연말까지 신용카드사 연체율은 2.6퍼센트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당시 미국 신용카드 산업의 연체율 수준보다 오히려 더 안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신용카드 연체율은 1년 뒤인 2002년 말에 6.6퍼센트로 3배가 뛰어 올랐고 다시 1년이 지난 2003년에는 14퍼센트라고 하는 기록적인 연체율을 보이면서 카드 대란의 정점을 알린다.

물론 그 때에도 신용카드 뿐 아니라 예금은행들의 연체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은행들의 연체율은 1.5~2.5퍼센트 사이를 움직이는 정도였고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에 기록했던 연체율 7.1퍼센트에 비하면 높은 수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신용카드 대란 당시 은행도 주택담보 대출을 급팽창시켰지만 위험

축적의 초기단계를 지나고 있었고 아직 표면화될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다.



지금 역시 2011년 1분기 기준으로 신용카드사들의 1개월 이상 연체채권 비율은 1.63%로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1.3분에 다시 증가해서 1.91%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예금 은행들의 연체율도 대체로 위험신호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가계대출이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3년 카드대란의 경험을 떠올린다면, 연체율은 얼마든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일종의 위험 결과지표이지, 위험을 경고해주는 예고 지표의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